

보도시점 2025. 3. 18.(화) 17:00 배포 2025. 3. 18.(화) 16:00

제2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등 논의
- 수산분과위원회 및 산림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18일(화) 제24차 본회의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에서는 식품산업을 첨단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기술(산업)’ 지정, 식품 바이오 파운드리 등 공공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R&D투자 확대, 첨단산업설비 도입 등 첨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②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에서는 화학비료와 퇴액비의 일관된 관리기준을 확보하고 사용자 맞춤형 품질관리와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통해 퇴액비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③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고수온, 남획 등으로 국내산 원료 공급이 불가능한 수산전통식품 원료 중 명태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수입산 원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과 「바이오 경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안건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농어업위에서 추진할 22건의 안전과 산림분과 위원회·수산분과위원회 신설, “전략대화기구” 운영을 담은 주요업무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략대화기구는 “농지소유, 농산물 물가 등 농어업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했으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 이슈를 폭넓게 숙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특별주제 발표로 이상훈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 「첨단식품산업 및 <가칭>바이오 팍 특화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축수산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축수산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수산 “바이오 팍”의 정의와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농수산식품산업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농어촌은 인구절감, 기후위기, 기술 발전 등으로 농어업 대전환의 시대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농어업위에서는 농어업인이 잘 살고 농어촌이 풍요롭게 발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산업 기반 확충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사무국	책임자	팀 장	송지숙 (02-6260-1211)
	총괄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한소자 (02-6260-1212)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 (추진배경)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정책 개선 방안 모색
 - 가축 구입비 상승과 수입 사료비 부담으로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악취민원 증가 및 환경규제* 강화로 분뇨처리 부담 증가
 - * 해양투기 금지('12) → 무허가축사 적법화('17) → 부속도검사 의무화('21) → 퇴비·액비 자원화시설 암모니아 배출규제('29)

- (필요성) 환경규제 대응과 생산비 절감의 대안으로서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불편, 인프라 미비 및 제도적 한계 해소 필요
 - 기존 경축순환 활성화 정책은 가축분뇨 발생자인 축산농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사용자인 경종 및 시설농가에 대한 지원 부족
 - 퇴액비의 경우 성분 등 품질의 균일성이 낮고, 살포를 위해 추가적인 시설과 장비가 요구되어 경종농가의 물리적·경제적 부담 가중
 - * 가축분 퇴액비는 무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이동, 보관, 살포 곤란

- (추진내용)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 (세부개선방안)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 화학비료와 액비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정책협의체 운영 필요
 -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기준 강화 및 활용기술 다양화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요약

1. 추진배경

- 글로벌 경제질서 재조정(자유무역 질서 축소, 현대중상주의 확대)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성 증대
 -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기술격차 축소, 제조공정 자국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견인 산업 육성 필요
- 국가브랜드 인지도 제고, K-컬처 성공으로 인한 매력도 상승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미래 수출산업으로 육성 시급
 - 식품산업의 안정적 수출 성장가능성*, 안보적 중요성**, 타 산업 파급효과*** 고려 시 전략적인 산업 지원 정책 수립이 중요
 - * 인구비례로 양적 수요가 결정되며, 기호도에 따라 특정 식품을 선택하는 특성으로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음)
 - ** 생존필수재로 공급망 외부화로 국내 생산기반 붕괴 시 민감성/취약성 증대
 - *** 1~3차 산업을 포괄하여 농수산물 생산-제조-유통-서비스업 대규모 고용

2. 우리 식품산업의 위치

- (글로벌 트렌드) 푸드테크(기술혁신), 지속가능성(친환경, 대체식품), 건강지향(기능식품) 등을 트렌드로 연평균 6% 안정적 성장 중
 - 다만 국가 간 갈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 관세·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 (국내 현황) GDP 대비 식품산업 비중은 지속 증가 중이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은 한계*
 - * 국내 식품산업 평가: (강점) 가공경쟁력, 건강식품, K-브랜드, 물류인프라 / (약점) 수입산 원료의존, 영세성, 작은 내수시장, 규제장벽
 - 푸드테크,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산업을 지원 중이나 규제 완화(기술/인력), 물류시스템 지원, 수출 마케팅 강화 등 정책수요 상존

3. 해외 식품산업 및 국내 타 산업 육성사례

- (해외) 네덜란드(중점 산업 지정, 물류효율화, 클러스터), 미국(민간 R&D, 정보 제공), 일본(브랜드 가치, 법적 지원) 국가별 산업 지원 모델 보유
 - 민간 R&D 지원 강화, 항만 물류 인프라 중심의 집적효과 창출, 브랜드 가치 제고, 클러스터 구축 및 인적 역량 향상 등이 중요
- (국내) 반도체(R&D·설비투자 세액공제, 인력양성, 소부장 국산화), 화장품(민간 ODM 역량, 글로벌 규제협력, 소재개발 지원) 산업별 성공요인 보유
 - K-브랜드 확산, 글로벌 광고·유통채널 개방을 기회로 적극적인 R&D 지원, 기초연구 수행, 규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성공요인

4. 추진전략 및 과제

“수출 1천억 달러 농수산물산업 육성을 위한 가치사슬 전방위 경쟁력 강화”

- 원료 공급망 효율화 및 안정화
 - (국내) 1차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향상, 농수산업-식품기업 간 연결성 강화, 규모화를 통한 원료 생산 비용효율성 제고
 - (해외) 수입 다변화·다각화, 해외농어업 개발, 산지 인프라 지원
- 첨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전략산업) 식품산업을 식량안보, 국가 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산업)로 지정하여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
 - * 과기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식품산업을 지정하여 시설·설비투자 세액공제, 대규모 투자 등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공공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첨단식품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신기술 상용화 및 지속 가능 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 (식품바이오파운드리) AI, 로봇 자동화, 합성생물학, 빅데이터 활용 → R&D, 시제품 생산 과정을 표준화·자동화·고속화 등 제조공정 혁신
 - * (미생물·단백질 연구) 미생물 기반의 신소재 및 식물성 단백질, 미생물 단백질 연구·개발

- **(R&D 투자 확대)** 미래 식량 문제 해결과 글로벌 시장 선점, 첨단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R&D 집중 투자**
 - * 미생물, 단백질, 효소, 대체육, 기능성 식품, 첨단기술 융합 기반 ‘K-식품소재’ 첨단 바이오·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대체 소재 연구개발 등 제품화 촉진
- **(첨단 생산설비 도입)** 자동화, 로봇 기술을 활용한 **식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생산설비의 고도화**
 - * 스마트 팩토리, 로봇 공정 시스템, 3D푸드 프린팅, 고압 가공기술, 세포배양 시스템, 효소 반응 시스템, 업사이클링 식품 가공 설비 등
- **(식품클러스터 권역화)** 식품산업 균형발전, 지역별 산업 특화,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추진**
 - * 예시) 수도권(HMR 스마트 푸드), 충청권(기능성식품, 바이오 소재), 호남권(전통발효 식품, 친환경식품), 영남(해양바이오 수산가공식품), 강원(청정유기농, 고지대 특산물)
- **(위탁 생산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투자비용 절감, 생산 효율성 및 신제품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첨단 식품 OEM, ODM 전문기업 육성 지원**
 -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초기 투자비 절감, 생산 인프라없이 고품질 신제품 출시, 신속한 시장 대응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다양한 제품 출시,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 브랜드별 특화 제품(기능성 식품, 대체육 등) 생산 등

□ 전략적 유통·수출 지원

- **(공동물류센터)** 해외 주요 물류거점 운영 중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일부 **전용공간 제공, 비용 보전 및 컨설팅**
 - * 로테르담/바르셀로나/자바2/LA → 엘우드 물류센터 등 11개소로 확대(~'27)
- **(항만·공항 인프라 구축)** 부산항, 인천항 및 가덕도 신공항을 **농수산물 수출·가공(배후단지 등) 첨단 허브항으로 조성**
 - * 항만 기반시설 확충(선석, 배후단지) 및 신규공항 건설 계획수립 시,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 협업 추진(아시아·미주 등 관문항·공항)

- (해외시장 정보 수집·유통 강화) 수출국 정보는 정부·공공기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용 편의성 강화

* aT 농식품수출정보플랫폼, 식약처 원스톱식품수출정보창구 등

** 수출정보/규제정보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출에 성공·확대한 사례 전파 등

- (수출역량 강화) 민간 중심의 'K-Food Agency' 육성 및 현지화를 위한 'K-Food 수출지원센터' 구축

* 가칭K-Food Agency(기획자): 식품기업 성장 통합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상품기획-생산-브랜딩·마케팅-해외진출 등 전주기 솔루션 제공

* 가공식품 수출 전담기관: 수출절차, 수출제품, 법규, ESG 등 원스톱 정보 제공 및 가이드를 제공하고 K-Food Agency(기획자) 육성·관리와 식품기업 매칭 지원사업 운영

- (브랜드 인지도 확산) 국내외에서 기존 방송채널과 박람회 등에 더해 OTT, SNS에 'K-푸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고비 집행 확대

- (위조상품 대응) 민간 주도 식품 R&D 촉진과 식품안보 대응 및 위조 상품(K-푸드 로고 홍보 등) 대응 강화를 위한 가칭식품저작권 제도 도입 검토

* 가칭식품저작권 제도: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가공기술, 레시피, 조리법 등을 보호하고 유사 제품 생산시 원천 개발자에게 로열티(저작권)를 제공

-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법 제정) 수출 전담 조직 신설, 법정 기본 계획 수립 등 수출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요약)

□ 일반현황

- (목적)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
- (근거) 전통식품(식품산업진흥법), 수산전통식품(수산식품산업법)
- (기본인증 요건) ①국산 농수산물 사용, ②예로부터 전승되어온 원리에 따라 제조, ③한국 역사 속 고유의 맛, 향, 색 등 풍미를 지닐 것
 - * 인증현황 : 전통식품(417개 업체/ 885개 품목), 수산전통식품(74개업체 91개 품목)
- (인증절차) ①서류검토 → ②공장심사* → ③제품심사후 인증
 - * 공장심사 항목 중 HACCP 인증 업체는 위생관련 항목 심사 생략 (농산품)

□ 문제점

- 국내산 원료 생산 불안정에 따른 전통식품 생산 등 활성화에 한계
 - 기후변화 등 국내산 생산이 불가능한 수산물(예: 명태)은 전량 수입산으로 제조·가공됨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으로 인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제위생기준 수준(HACCP) 위생 관리 한계
 - 발효 등에 따른 제조 특성에 따라 유통 과정에서 식품 오염 가능성이 높고, 제조업체들의 영세성으로 HACCP 수준의 요건을 갖추는데 한계
 -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생기준으로 통관거부 사례 발생(빈발)
 - * 미국 등 주요국 및 FAO, CODEX, WHO 등 국제기구들은 HACCP 기준 적용 권장(추세)

□ 개선방안

- ① 국제기준 수준의 인증요건 강화 : ①HACCP 수준으로 심사를 강화하거나 ②전통식품 신청 요건을 HACCP 인증 업체로 의무화 검토*
 - * 업계 영세성 등을 고려, 컨설팅,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을 통해 단계적 도입 필요
- ② (수산) HACCP 인증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위생 관련 심사항목(4건) 생략 (농식품부 既절차 간소화, 해수부 도입 필요)
 - *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2호 나목(작업장)·바목(용수 관리)·사목(개인 위생)·아목(환경 위생)의 심사를 생략
- ③ (수산) 수입산 수산 원료 일부 허용 : 기후변화 등 국내산 원료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수입산 등 허용 검토(법령 개정 필요)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요약

□ 배경 및 필요성

- 농산어촌 중에서도 농촌·어촌 대비 산촌의 소멸 위기가 심각
 - * 산촌은 국토의 43.5%를 차지하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
- 국민의 산림복지 수요는 코로나19를 지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공공 예산·운영의 한계로 산촌소멸 대응 및 다양한 국민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 대두

□ 추진과제

① 산림복지분야 민간투자 여건 강화

- 산림복지 PFI(공공시설 민간투자) 제도 도입 검토 및 산림복지 분야 민간위탁 운영 시범사업 검토
 - * PFI(Public Facilities Investment; 공공시설 민간투자): 지자체에서 부지선정 후 공모를 통해 민간이 복지시설 조성 및 일정기간 위탁 운영
- 지역별 민관정책협의체 구성 및 산림휴양복지분야 위케이션 활성화

② 민간 산림복지시설 경쟁력 강화

- 민간 산림복지시설 경영 지원조직 구성·운영
- 산림복지시설 운영자 대상 복합경영 교육 지원
- 민간 산림복지시설 품질 등급제 마련 및 인센티브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전국조직 운영 지원

③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민간부문 지원역할 강화

-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을 위해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합리화
- 공립 산림복지시설 설계·운영에 민간 참여 의견 반영을 위해 시·군·구청장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산촌활성화·민간참여 확대 반영
 - * 중앙단위 **자문지원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시군구 자문위원회 검토 지원
- 운영혁신·공동홍보·행사공동개최 등 국공립복지시설의 지역 내 민간시설 지원 기능 강화

□ 기대 효과

- 산림복지 운영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산촌 지역의 경제·공동체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주체 참여로 국민 선택권 확대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편익 증대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1. 의결주문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4개 특별위원회* 운영 중
* 미래산림특위(존속기간 : '23.3.~'25.3.), 미래수산특위('23.3.~'25.3.), 세제개선특위('23.5.~'25.5.), 바이오경제특위('24.6.~ '25.6)

- 농특위법 시행령 상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시행령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25년 6월에 종료예정인 바이오경제특위는 논의 체계 연속성 확보와 특정 현안* 대응을 위해 존속기간 연장 필요
*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 바이오경제 미래비전 제시

3. 주요내용

-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을 1년 연장

특별위원회	당초 기간	연장 기간	연장 사유(필요성)
바이오경제특위	'24.6.~'25.6.	'25.6.~'26.6.	식품 바이오 규제 혁신, 농축수산 바이오팜과 첨단 바이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운영 전략 모색 필요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농어업위 운영위원회 검토 : '25. 3. 5.
- 당연직 부처 등 의견조회 : '25. 3. ~